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전용배



스포츠사회학의 관점에서 체육·스포츠를 규정할 때,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체육·스포츠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다'는 개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스포츠는 체제의 안정 없이는 성장이나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시아특구 강국인 중 동국가들이 최근 기량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체제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즉 스포츠는 이념도 필요 없고, 정치권력이 좌든 우든 상관없다. 스포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오직 '체제안정'만을 바랄 뿐이다. 따라서 스포츠는 '운명적 보수'이다. 그렇다면, 스포츠만 보수적일까. 아니다. 유교사상이 지배한 조선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는 보수의 지배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물론 정치성향이나, 대북정책,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와 같은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의미 있게 구분되기도 하지만, 삶의 방식이나 조직문화와 같은 추상적 개념에서는 보수의 틀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다. 장유유서(長幼有序)는 아직도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이다. 기존질서에 대한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진보적 관념과 사상은 아직 한국사회에서 남아야 할 벽이 첩첩산중이다. 정치적으로도 노무현 정권 정도가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기는 했지만 진보적 정책을 제대로 펴 본적은 없다. 임기 중에

내보지도 못했다"고 고백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열린우리당, 민주당, 한나라당의 정책은 대북정책과 국가보안법 정도를 제외하곤 차이가 거의 없었다. 복지정책의 확대와 중부세는 국가라는 존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였지, 진보·좌파적 정책이라 할 수 없다. 나름대로 진보적이라는 민노당의 지지율과 의석수를 보라. 한국사회에서 진보가 살아남고 성공하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등가적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물질 토대에서 상대가 안 된다. 스포츠로 치면

한국은 보수의 나라다

'좌파정부'라는 색깔공격에 시달렸던 노무현 정권의 어떤 정책이 진보정책이었던지는 아직도 알지 못한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노무현 정권의 임기 초를 생각해보자. 카드 대란의 후유증으로 인한 임기 초반의 경제위기, 한나라당 145석, 민주당 62석, 열린우리당 47석, 자민련 10석의 의회구성, 언론의 색깔공세 상황에서, 어느 대통령이 진보 좌파적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후, 어느 자리에서 "진보적 가치를 표방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본래정책은 깨

NBA드림팀과 한국고등학교 팀의 경기와 같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착시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개개인의 호불호이며, 상식과 비상식, 합리와 비합리, 소통과 막힘에 대한 갈등이다. 그럼에도 굳이 이념적으로 규정하려면 '보수와 보수'의 갈등일 뿐이다. 보수정치가 주를 이루는 한국정치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사실 '지역불모주의'이다. 이 구도의 최대 수혜자는 경상도를 불모로 잡고 있는 한나라당이고, 전라도 기

반의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보고 있고, 충청도에 집이 있는 자유선진당은 '떡고물'을 물리고 있다. 모두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나라당의 독식구조이다.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강원도를 다 합쳐봐야 국회의원석 65석에 지나지 않는다. 경상도는 68석이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에서 전라도가 한 후보자에게 95% 투표해야, 경상도 50% 투표면 게임 끝이다. 따라서 지역주의도 등가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이나, 국회의원 선거법부터 중대선거제로 바꾸어야 한다. 지역민들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이 일은 오직 확실한 지역 기록권을 가진 한나라당이 나서야만 가능하다. 진보가 이 땅에 꽃을 피우는 일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보수의 나라 한국에서, '보수주의자'로 자처하지만, 제대로 된 보수를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이 아이러니할 뿐이다. "고만해라, 많이 죽었다 아이가", 누가 많이 먹었는지는 스스로가 알 것이다. 모든 사람을 잠깐은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동명대 체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미디어법 강행처리 유감이다

7개월간 국회를 마비시켜온 미디어법이 아련의 강력한 반대 속에 직권상정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표결처리됐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 우리는 미디어법의 강행처리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민 60~70%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하면서까지 강행처리할 만큼 시급한 법안이었던지 의문이다. 이 법은 비정규직법이나 기타 민생법안처럼 시급한 사안도 아니며 엄청난 파장과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는 법안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성급하게 힘을 모아 밀어붙인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디어법의 강행처리로 개선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민주당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고, 정세균 대표는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언론노조 등은 아예 '정권 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버르고 있다. 특히 방송법의 경우 사상 초유의 재투표

까지 감행해 향후 적법성 논란마저 일 것으로 보인다.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미디어법의 통과로 언론의 지나친 상업화와 여론 독과점의 심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방언론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개정 신문법은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이 폐지됐으며 방송사나 일간신문의 다른 일간신문 소유에 대한 규제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중앙 신문·방송사가 지방 신문·방송을 소유할 수 있게 돼 지방 여론마저 중앙 논리에 왜곡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약아도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까지 중앙 독점이 이뤄진다면 그 폐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18대 국회는 또다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공멸을 자초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전국 최하위인 광주·전남 기업 호감도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천27명(광주 59명, 전남 79명)을 대상으로 2009년 상반기 기업호감도지수(CFI)를 조사한 결과 광주지역 호감도 지수는 100점 만점에 44.5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남(46.1점·14위)도 전북(45.4점·15위)과 함께 최하위를 형성했다. CFI는 국가경제 기여도와 윤리경영 등 5대 요소와 국민이 기업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 호감도 등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호감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지역 CFI를 요소별로 보면 국제 경쟁력 71.3점으로 최고치를 나타냈고, 생산성 향상이 63.4점, 국가경제 기여 49.0점, 전반적 호감도 42.6점인 반면 윤리경영실천이 13.9점, 사회공헌활동은 34.7점으로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국 평균 기업호감도 지수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2.1점이 상승한 50.2점을 기록했다. 호감도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일반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높아진 반면 지역민들은 상대적으로 정경유착이나 분식회계 등 비윤리적 경영에 골치 많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경영권 세습이나 사회적 책임 소홀 등 기업의 경영행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들은 윤리경영과 사회공헌활동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즉별 경영체제를 탈피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그러나 낮은 기업호감도가 맹목적인 반기업 정서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 활동에 대한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윤리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에 힘을 쏟는 기업들이 늘어나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최지윤 컷물에도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컷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추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만 간주한다. 컷물은 공기와 같이 본질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자신의 존재조차 알리지 않는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약 1리터 정도의 컷물이 코 주변의 비어있는 공간, 즉 부비동에서 생성이 되어 코로 나오게 된다. 숨을 들이킬 때 몸 안으로 들어온 공기를 습도가 높은 공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일종의 가습기 역할이다. 한

기고 위철 광주시에서는 하루 평균 112건의 구급출동을 합니다. 한껏 축복받는 탄생에서 쓸쓸한 노환까지 서로 다양한 환자들을 대하며, 이분들께서 이용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항상 친절하게 내 부모님같이 모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구급수요의 예측과 IT시대에 적합한 구급서비스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보다 향상된 구급행정을 전개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無等鼓 불내기 의식 창조행위다. 불내기 의식은 흔히 자연에서 불을 얻는 형식으로 시작된다. 포스코 광양제철의 경우 광장 내 '고로 공원'에서 태양 채화(採火)를 한다. 이후 올림픽 성화를 봉송하듯 용거와 고로의 풍구에 밀어 넣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불내기 는 한 때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정부 요인이 말을 정도로 마중한 임무였다. 우리나라 첫 일관 제철소인 포항제철이 지난 1973년 6월8일 아침 제1고로에 불을 넣을 때도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 그로부터 36년만인 지난 21일 오후 5시 55분, 포스코는 세계 최고 생산량을 자랑하는 광양 4 고로에 불을 넣었다. 광양 4고로는 27시간이 지난 22일 오후 9시 평하는 굉음과 함께 오랜 지 및 쇳물을 토해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주춤했던 철강생산이 정상화된 순간이었다. 다시 쇳물을 뽑기 시작한 4고로처럼 우리 경제도 다시 살아났으면 한다. /김주정 경제부장 jinesw@

위생 검증안된 목장갑, 음식물 만질때 주의력 식품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고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지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아 안타깝다. 목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인시켜 줘야 할 것 같다. 사람에게 피해가 적다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지 않다면 사용 금지를 요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목장갑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갑을 권장하고 있다면 새로 만들어서라도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김기봉·광주시 서구 광천동

회전문 안전사고 예방 장치 마련 시급 며칠 전 병원에서 회전문에 막 들어가려는데 나보다 앞에 간 사람이 회전문을 세게 밀어 나는 거의 힘 안들고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내 뒤에 따라왔던 어린이가 그만 회전문에 다쳐 머리가 찢어져 버렸다. 어린이들의 손이 회전문에 끼이는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그중에는 앞선 이용자가 뒷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 세게 회전문을 미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빠르게 돌아오는 회전문은 큰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노인이나 어린이가 회전문에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2009년 7월 23일 목요일 17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독자신문·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 A X 222-4267> <F A X 227-0118>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F A X 02-773-933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F A X 220-551>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F A X 02-773-9335> ※국로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